

공 개



의안번호	제 25 호
의 결 연 월 일	2024. 1. 31. (제 2차)

의
결
사
항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 본 안건은 수정의결되었는바 관련 의사록과 의결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

제 출 자	위원장 김주현
제출 연월일	2024. 1. 31.

1. 의결주문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 제출기한 내에 조치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2019. 1. 24. ~ 2019. 1. 31. 및 2019. 3. 25. ~ 2019. 4. 5. 기간 중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에 대하여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은행법」에서 정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기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 <붙임 1>

다. 제재내용 공개안 : <붙임 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2021.4.15.) 심의필
- 제1차 임시안전검토 소위원회(2024.1.30.) 심의필

<별지>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가. 금융사고 예방대책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의 위반

□ 기관에 대한 조치 : 과태료 4,8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 사유 : 「은행법」에서 정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의무 위반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 위반
- 법적 근거
- 「은행법」 제34조의3(금융사고의 예방) 제1항 제1호 및 제4호, 제69조(과태료) 제1항 제5의3호
-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제1항 제1호 및 제4항,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일반기준 및 2.개별기준 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제1항 및 제3항,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1항,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13호 및 제4항,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항 및 제2항 제3호, [별표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 제1호 및 제6호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2. 조치사유

1. 금융사고 예방대책 및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은행법」 제34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4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은행은 은행 임직원의 사기·횡령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이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이하 "CA은행")은 검사착수일(20xx.x.xx.) 현재 다음과 같이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음*

- * ○○○○○부 소속 ○○○ ○○(이하 "사고자")의 금융사고(x,xxx천 미국달러)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위법행위가 장기간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사고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컴퓨터등이용사기)로 징역 7년형 확정(대법원 2020.6.25., 2020도4240)

① 무역금융 관련 업무처리 절차 마련의무 위반

- CA은행은 SWIFT* 전문 교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수출입 금융상품 (B/A Financing)**을 빈번하게 취급하면서,

*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국제은행간 통신협정

** Banker's Acceptances Financing : 기한부 환어음의 대금을 신용장 매입은행에게 즉시 지급하고, 어음만기에 신용장 발행은행으로부터 기지급한 대금을 결제받는 무역금융 여신거래

SWIFT 전문의 접수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텍스트 출력물만을 근거로 SWIFT 전문을 정상수신 처리하는 업무관행*을 방치하고,

* 통상 금융기관은 SWIFT 전문이 수신되는 경우 내부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전문 내용을 접수하고, 텍스트 출력물은 대사 및 증빙 보존 목적으로만 활용함

수출입 금융상품(B/A Financing) 만기 연장시 기존 여신을 상환 처리하고 신규로 대출하는 것처럼 처리하는 업무관행을 방치하는 등 대출만기 연장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등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그 결과 사고자가 위조 출력물을 만드는 방법으로 xx건의 만기연장 요청(x,xxx천 미국달러), x건의 상환수권 통지 및 상환요청(x,xxx천 미국달러) 등의 SWIFT 전문이 수신된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 상환거래를 대출 만기 연장 거래처럼 보이도록 위조하여 대출금의 입·출금이라는 원장상 거래 근거를 만든 후 정상 상환된 대출금을 무단으로 송금(x,xxx천 미국달러)

- CA은행은 SWIFT 시스템상 송금전문 발송 등 업무처리의 경우 결재권한을 부서장과 사고자에게 각각 부여하는 한편,

대출관리시스템, 무역금융관리시스템 등에서의 상환수권 기표, 대출신청·취소, 회계원장 변경 등 업무의 경우 결재권한을 부서원 모두에게 부여하는 등 수출입금융 업무처리를 실효성 있게 견제할 수 있는 직무분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그 결과 사고자가 본인의 결재만으로 송금전문을 발송하고, 대출 및 회계원장을 조작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CA은행은 이미 취급한 대출의 취소, 회계처리 변경 등 취소·정정거래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및

결재권자를 정상거래시보다 상위 직급자로 정하는 등 신중한 의사 결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통제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그 결과 사고자가 발생한 미수이자 은폐를 위해 이미 실행한 대출을 직접 취소하고, 이자 연체사실 은폐를 위해 미수이자를 미수수수로 전환하여 기표하는 등 임의적 거래조작을 방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CA은행은 업무처리 시스템의 비밀번호가 도용될 경우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담당자가 아닌 직원이 담당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은행의 운영시스템(BankTrade, T1+ 등)에 접속할 경우 이를 인지·확인할 수 있는 통제절차와 동일한 ID 및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 중복접속(이중 로그인)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그 결과 사고자가 다른 직원의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SWIFT 등 전산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함으로써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검사결과 지적내용 1.① 관련 법규 >

1. 「은행법」 제34조의3제1항제1호 및 제4호
2.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4항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3항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호 제7호 제13호 및 제4항
5.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호, [별표2] 제6호

- ② 무역금융 관련 SWIFT 송금업무 등에 대한 검증절차 및 고위험 사무에 대한 금융사고 예방대책 마련의무 위반

- CA은행은 송금업무가 사기·횡령 등 범죄행위로 직접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SWIFT 시스템에서 동 업무를 처리하면 은행 업무시스템 등을 통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송금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절차 및 관련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그 결과 사고자의 부당한 송금을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CA은행은 자금대사시스템(Corona)을 통해 은행 원장과 업무용 예금계좌(Nostro 계좌) 입·출금 내역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적정성을 검증하면서 원장·입출금 불일치 사안에 대해서 발생 원인은 확인하지 않는 등 실효성 있는 점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그 결과 사고자가 자신의 전 배우자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 △△에 ××회에 걸쳐 ×,×××천 미국달러를 송금하면서 참조번호가 원장의 BA파이낸스 거래와 일치하지 않았는데도 불일치 원인을 해당 부서에 정식 통보 하여 소명토록 하지 않고, 현금 유출입 금액의 일치 여부만 확인한 후 ○○○○○ 담당자가 수기로 정상 거래로 처리함으로써 송금을 통한 위법행위가 장기간 은폐

- CA은행은 20xx.x.xx.~x.xx. 기간중 ○○○○○부 직원 ×명 등 총 ×명의 직원이 은행 공용폴더에 SWIFT 등 전산시스템 접속을 위한 사용자 비밀번호를 저장·관리하고 있어 비밀번호 도용에 의한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검사기법 개발·운영 대책*과 이와 관련된 금융사고 예방대책** 및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적정하게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0xx.x.xx. 내부통제위원회 결정으로 비밀번호 도용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면서 업무처리 시스템(SWIFT, Combo, BankTrade 등)에서의 불법 접속 여부 확인 및 사무실 비밀번호 관리실태 불시점검 등은 실시하지 않는 등 특명감사를 부실하게 실시

** 누구나 접근가능한 공용폴더에 저장·관리하고 있던 사용자 비밀번호의 강제변경 조치를 하지 않았고, 비밀번호를 공용폴더에 보관한 ○○○○○부 직원은 본 건 비밀번호 부당 저장·관리 적발 후에도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지 않았으며, 사고자에게 비밀번호를 도용당한 직원들(총 ×명) 모두 탁상달력 등에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부착·보관함으로써 사고자가 임의로 타인의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게 하였음

※ 그 결과 20xx.x.xx. 내부통제위원회의 지시로 실시된 비밀번호 도용 여부 등에 대한 특명감사 이전에 발생한 ××건의 금융사고를 적시에 인지하지 못하는 한편, 20xx.x.xx. 이후 ×건의 추가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검사결과 지적내용 1.② 관련 공통 법규 >

1. 「은행법」 제34조의3제1항제1호 및 제4호
2.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4항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3항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호, 제6호, 제7호, 제13호 및 제4항
5.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별표2] 제6호

2. 내부통제 업무위임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두어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 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하는데도

- CA은행은 검사착수일(20xx.x.xx.) 현재 준법감시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업무의 일부를 △△△△△장이 수행하도록 하면서,

준법감시인과의 역할 및 책임 분담과 권한의 위임관계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검사결과 지적내용 2. 관련 법규 >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제1항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2호, 제3호, 제13호 및 제4항
3.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1항 [별표2] 제1호

관계법규

☐ 은행법

제34조의3(금융사고의 예방)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점(대리점, 국외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전산사무, 현금수송사무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5의3. 제3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은행

☐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3(금융사고 예방대책 등) ① 법 제3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은행 임직원의 사기·횡령·배임·절도·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
- ④ 법 제3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전산사무, 현금수송사무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검사기법 개발·운영 대책 및 이와 관련된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말한다.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타. 은행이 법 제34조의3 제1항을 위반한 경우 : 6,000만원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별표]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제34조 및 제35조 관련)

25. 제24조를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

[별표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제11조 제1항 관련)

1.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6.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금융기관점사및제재에 관한규정

-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은행법」 등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

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
· 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은행과 금융정책과	은행검사3국
연 락 처	02-2100-2952 02-2100-2824	02-3145-8356